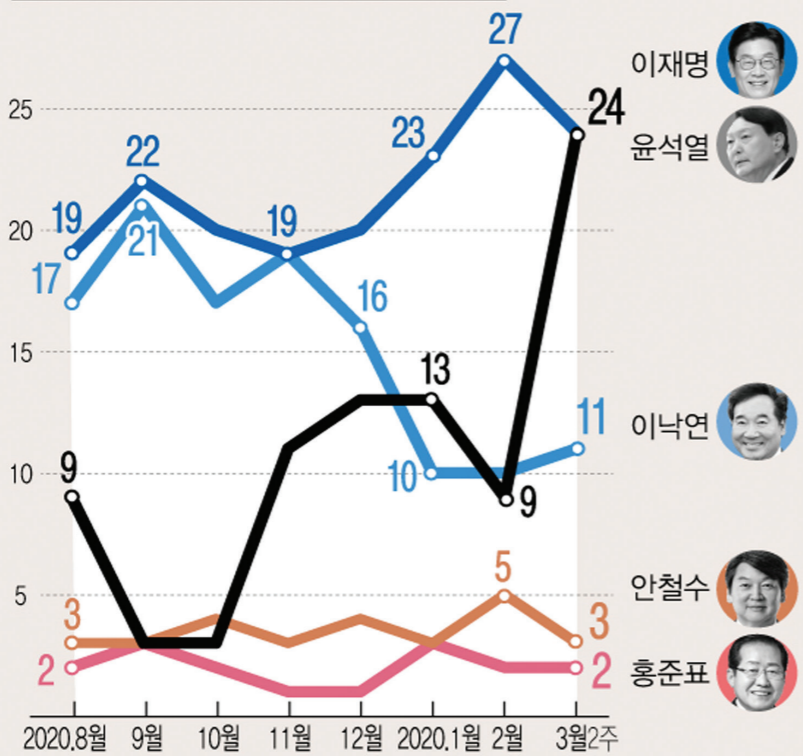


윤석열, 여론조사마다 돌풍... 與 “반기문·고건과 달라” 긴장

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단위:%
3월2주(9~11일), 응답률 14%(1003명 응답완료)
전화조사원 인터뷰, ±3.1%포인트(95%신뢰수준)



※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,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
자료: 한국갤럽

차기 대권 레이스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돌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.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난 뒤 실시된 차기 대선주자 여론조사들에서 단숨에 선두권으로 치고 나온 탓이다. 그간 윤석열 현상을 평가절하해온 여

당 내에서도 점차 긴장감이 흐르는 양상이다. 12일 한국갤럽 조사(9~11일 실시)에 따르면 '다음번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느냐'고 묻은 결과 윤석열 전 총장과 이재명 경기지사

한국갤럽, 윤석열·이재명 24% 동률...尹 15%p 급등
KSOI, 윤석열 32.4% 이재명 24.1%, 이낙연 14.9%
리얼미터,尹 28.3% 이재명 22.4% 이낙연 13.8%
한길리서치,尹 29% 이재명 24.6% 이낙연 13.9%
NBS, 이재명 25%·윤석열 24%...1%p차 각축전
유인태 “산전수전 다 겪은尹...쉽게 후퇴 안할 듯”

가 24%로 나란히 1위를 차지했다. 이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11%로 뒤를 이었다. 윤 전 총장의 경우 한 달 전 조사(9%) 대비 15%포인트 수직상승했고, 이 지사는 3%포인트 하락했다. 한국갤럽 외에도 윤 전 총장의 대선주자 지지율은 지난주 검찰총장직을 던진 뒤 실시된 주요 여론조사에서 모두 큰 폭으로 상승세를 보였다. 지난 8일 발표된 tbs 의뢰 한국사회여론연구소(KSOI) 조사(5일 실시)에서 윤 전 총장은 32.4%로 선두를 차지했고, 이재명 지사는 24.1%, 이낙연 위원장 14.9%로 뒤를 이었다. 윤 전 총장은 전월(14.6%) 대비 대폭 포인트 이상 폭등한 셈이다. 같은 날 나온 문화일보 의뢰 리얼미터 조사(6~7일 실시)에서도 윤 전

총장은 28.3%로 오차범위(±3.1%) 내 단독 선두였다. 이재명 지사는 22.4%, 이낙연 위원장은 13.8%였다. 지난달 22~26일 실시된 오마이뉴스 의뢰 같은 기관 조사에서 윤 전 총장이 15.5%였던 것과 비교하면 단숨에 30%대 턱밑까지 뛰어올랐다. 쿠팡이츠 의뢰 한길리서치 10일자 조사(6~8일 실시)에서도 윤 전 총장 29%, 이 지사 24.6%, 이 위원장 13.9% 순이었다. 전달 대비 이 지사는 2.7%포인트 내려간 반면, 윤 전 총장은 8.7%포인트 오르며 오차(±3.1%) 내이지만 선두가 뒤집혔다. 11일자 엠브레인퍼블릭·케이스탯리서치·코리아리서치·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기관이 5일 합동으로 실시한 3월 2주차 전국대표조사(NBS)에선 이 지사 25%, 윤 전 총장

24%, 이 위원장 12%순이었다. 윤 전 총장의 3월 1주차 지지율은 9%로, 일주일 만에 15%포인트가 급등하며 이 지사와 1%포인트차 각축을 벌이는 모습이다. 지역으로 보면 전통적 보수 기반인 대구·경북(TK) 외에도 서울 등 수도권 충청권에서 윤 전 총장의 강세가 두드러졌다. 윤 전 총장 부친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 고향이 충남 논산인 만큼 '충청 대명론'이 다시 불붙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불는다. 4·7 재보궐선거도 윤석열 현상의 영향권에 들어간 모양새다. 11일자 KBS 의뢰 한국리서치의 서울시장 후보 가상 양자대결 조사(8~9일)에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박영선 민주당 후보 대결시 44.3% 대 39.5%,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박 후보 대결시 44.9% 대 37.0%로 나타났다. 오 후보는 오차범위(±3.5%) 안에서, 안 후보는 오차 밖에서 박 후보를 앞섰다. 민주당은 일단 표정관리를 하고 있지만 내부에선 심상치 않다는 반응이 감지된다.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KSOI 조사에 대한 소감을 묻자 "여론조사라고 하는 게 조사하는 기관이나 조사방식에 따라서 너무나 차이가 커서 잘

봐야 된다"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. 차기 당권주자인 홍영표 의원은 KBS 라디오에 나와 "여론조사가 아주 잘 나오더라. 대한민국 검찰을 자신의 정치적인 야욕을 위해서 재물로 바친 그 결과"라고 비꼬았다. 이어 "정치라는 게, 정치권이 굉장히 비정하고 국민들도 굉장히 냉정하다. 그래서 제대로 평가를 할 때가 올 것"이라며 거듭 평가절하했다. 그러나 친노원로 유인태 전 의원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석열 현상을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과 고건 전 국무총리에 빗대는 여론 내분위기와 관련해 "그분들보다 여기는 좀 더 단단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. 좀 더 내공이 있을 것 같다"고 지적했다. 이는 유력 대권주자로 급부상했다가 빠르게 동력을 잃었던 과거 반기문·고건 등의 케이스와 윤 전 총장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시각을 드러낸 것이다. 이어 윤 전 총장이 박근혜 정부시절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로 고초를 겪은 것을 거론한 뒤 "어떻게 보면 산전수전을 겪은 사람"이라며 "그런 사람이 원래부터 정치를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 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쉽게 후퇴도 안할 것 같다는 느낌"이라고 했다. 뉴스

'일파만파' LH 의혹에 변창흠 사실상 경질한 文...사과도 할까

한국토지주택공사(LH) 관련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'인사 카드'까지 빼 들었다. 야당에서 문 대통령의 '대국민 사과'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문 대통령의 향후 움직임이 주목된다.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LH 투기 의혹에 대한 책임을 물어 사의를 표명한 변 장관을 '시한부 유임' 시켰다. 문 대통령은 "변 장관 주도로 추진한 공공주택형 주택 공급대책과 관련된 입법의 기초작업까지는 마무리해

야 한다"는 조건을 달고 사의를 수용했다. 사실상 경질이란 해석이다.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월 중 부동산 대책 관련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. 변 장관은 신규 공공택지 사업과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관련 지구 지정 발표까지 마무리한 후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. 내달 말이나 4월 초 교체 가능성이 점쳐진다. 변 장관의 사퇴 수순으로 청와대는 '인사 실패'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. LH 등 공공이 주도해 대도시권 주택공급을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·4 주택 공급대책의 실질적인 추진에도 차질이 있을 수 있다.

당 초 청와대는 변 장관에 대한 경질론에 선을 그어왔다.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가 열렸던 지난 10일만 해도 "대통령께서 경질에 관한 언급을 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다"며 "여당 원내지도부도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"고 밝혔다. 분위기가 반전된 것은 하루 만인 11일, 정부합동조사단이 국토부와 LH 직원 1만4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1차 전수조사 결과 때문이었다. 투기 의심자로 확인된 LH 직원 20명 중 절반이 넘는 11명이 변 장관의 LH 사장 책임 시절 투기 의혹을 받는 토지

거래를 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. 변 장관의 거취 거론은 '시기상조'라는 입장이었던 정세균 국무총리는 조사 결과를 두고 "이번 조사 과정에서 변 장관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"며 "어떠한 조치가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도록 하겠다"고 밝혔다. 앞서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"정부 조사 결과를 보고 변 장관의 거취 문제를 건의하겠다"고 말했다. 장관 해임건의권을 갖고 있는 정 총리와 여론 서울시장 후보가 잇달아 목소리를 낸 데 이어, 당 내에서도 공개적으로 변 장관에 대한 사퇴 촉구의

'공공주택' 부동산 정책 수장인 변창흠, '시한부 유임' 결정 '경질론' 선 긋던 文, 1차 조사 결과와 악화된 여론에 결단 野 "대통령이 사과해야"...'국민 65%가 원한다' 여론조사도

목소리가 이어지자 문 대통령이 결단을 했다는 분석이다.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4월 총선을 앞두고 악화하는 여론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. 당장 야당에서는 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.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12일 논평을 내고 "사람 한 명 교체한다고 끝날 일이 아니"라며 "대통령께서는 이 사태에 대한 국정 최고책임자로서의 사과와 함께 전면적인 국정 쇄신에 대한 입장도 밝혀야 할 것"이라고 촉구했다.

여론조사기관 에스티아이가 지난 12~13일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, 응답자의 61.5%가 '3기 신도시 관련 LH 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에 대해 대통령의 대국민사과가 필요하다'고 답했다. '대통령이 사과할 필요가 없다'는 응답은 32.3%, '잘 모르겠다'는 6.2%였다.(95%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±3.1%p, 자세한 사항은 에스티아이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.) 뉴스

호남신문 광고안내

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.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. 믿고 맡겨 주십시오.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.

기사제보 (062) 222-2580	광고문의 (062) 228-2580
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축하·근조화환 전문점



전국 꽃배달 서비스

60,000

농장직영 광주꽃도매

☎ 직통전화 010-2400-7774
☎ 주문팩스 062-946-0053